

이차전지 산업

비중확대(유지)

미국 전력 장비 관련 행정명령 코멘트

분석의 기본가정

- 미국의 대중 공급망 견제는 안보 차원의 정책 기조로 장기 지속됨을 가정

트럼프 대통령 해외 전력 장비 규제 행정명령 서명: 배터리 ESS(BESS)도 규제 대상에 포함

- 현지시각 8/26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형 전력망 안보를 위해 외국산 전력 장비의 유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명령에 서명함. 미국 내 설치된 대규모 전력 시스템에 대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자행하려는 대상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관련 장비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를 이유로 설명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 궁극적으로는 대형 전력 시스템에 대해 해외 공급 업체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로 하며, 제재 대상국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산 장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함
- 대규모 전력 시스템은 지역 배전 설비는 제외한 69kV 이상 송전망 및 관련 발전 설비로 규정하며, 장비에는 원자로, 커패시터, 변압기, 인버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UPS, 발전기 등이 규제 대상으로 명시됨. 또한 이와 연계된 S/W, 원격 접속 기능,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음. 언급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안보와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규제 범위에서 배제됨
- 미국 에너지부(DOE)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미국 전력 시스템에 무단 접근, 악의적인 원격 행위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규제 대상 외국 기업(Covered Foreign Entity)에서 설계, 제조 및 공급한 대용량 전력 시스템, 장비에 대해 취득, 수입, 설치 등 대부분의 조치를 금지하는 것임. 또한 이전에 이미 설치된 외국산 장비에 대해서도 연결 해제, 교체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덧붙임
- 행정 명령 발효 120일 이내 세부 시행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관계 부처는 위험 품목을 목록화하여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도표 1. 8/26 전력 장비 행정명령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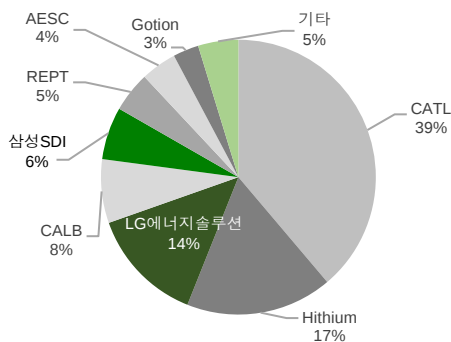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개요/배경	- 특정 외국 세력들이 사이버 공격·백도어 위협으로 대용량 전력 시스템의 안보가 취약해졌다고 판단 - 국가안보·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조치	- 미국 전력 시스템에 사보타주, 무단 접근, 악의적인 원격 행위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 - 규제 대상 외국 법인(Covered Foreign Entity)이 설계·제조·공급하거나 관할·지시하는 대용량 전력 시스템 및 전기 장비에 대해 취득·수입·설치 금지 - 행정 명령 발효 이전 이미 설치된 외국산 장비에 대해서도 격리·모니터링·연결해제·교체 등의 조치 부과 가능
주요 정의	- 대규모 전력 시스템: 69kV 이상 송전망 및 관련 발전설비(지역 배전 설비는 제외) - 대규모 전력 시스템 전기 장비: 원자로, 커패시터, 변압기, 인버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중요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무정전 전원 공급 시스템(UPS), (대형/소형/백업) 발전기, 고전압 차단기, 분산제어시스템 등 광범위한 품목 포함 - 규제 대상 외국 법인: 미국 무기 금수·제재 대상국 소유·통제, 또는 국방부/국무 장관이 안보 위해로 지정한 대상
이행 체계	- 에너지부(DOE) 장관이 관계부처(국방부·상무부·국토안보부 등) 협의를 거쳐 위험 장비, 공급업체 판단 - 120일 이내 세부 시행 규칙 마련 예정

자료 : 백악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ESS 밸류체인 반사 수혜 구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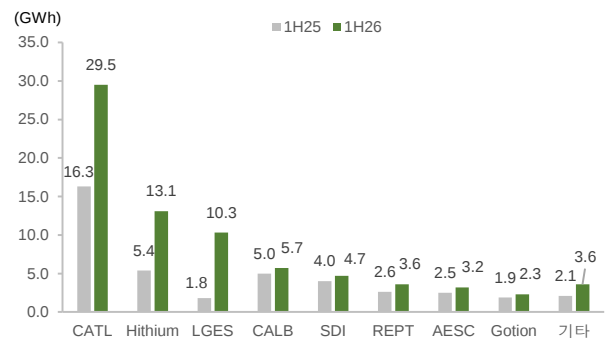
-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북미 ESS 배터리 설치량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나,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 점유율이 76%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전년 동기 81%) 있고, 한국 기업 점유율은 20% 내외에 그쳤음(전년 동기 14%). 중국산 ESS 배터리 점유율은 2024년 약 90%에서 낮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수입산 중국 ESS 배터리 탑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다만 이는 적극적인 현지 ESS 배터리 CAPA 증설 과정 속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충분한 현지 CAPA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한국 셀 메이커들은 올해 연말까지 합산 90GWh CAPA를 갖출 전망이며(LG에너지솔루션 약 60GWh, 삼성SDI 30GWh), 본격적인 생산 확장에 따라 이들의 미국 BESS 시장 점유율 또한 내년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함
- 기존에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와 ITC·AMPC에 대한 PFE MACR 규정, 그리고 현지 보조금 수혜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한국 배터리 기업의 반사 수혜 배경으로 부각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전력망 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중국산 BESS 구조적 차단 기조가 새로운 수혜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중국 점유율 대체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미국 에너지부(DOE)는 과거 2024년 발간한 BESS 공급망 보고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 특히 BESS 통합 업체가 중국 기업일 경우 소프트웨어 공급, 펌웨어·데이터 전송, O&M(운영, 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되어 정보 유출 및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미 미국 내에서도 BESS를 포함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보안 이슈가 부각되어 온 상황임. 금번 행정 명령은 이러한 대중 견제 기조가 구체적인 규제로 현실화된 것으로,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반사 수혜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임
- BESS 하위 소재·부품 중 다수는 이번 행정명령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 리스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상위 벤더 입장에서는 공급망 전반의 안보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기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영역에 대해 공급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명시적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탈중국 밸류체인 전환 흐름에 따른 장기적인 수혜 기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 이에 배터리 셀(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LFP 양극재(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 수냉식 시스템/부품(한중엔시에스, 신성에스티) 등 ESS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궁극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교섭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도표 2. 2026년 상반기 북미 BESS 점유율



자료 : SNE리서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북미 BESS 시장 기업별 탑재량



자료 : SNE리서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투자등급

기업분석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pm 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분석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과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